



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
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

초·중등 교육의 사교육 의존도 심화

▪ 우리나라 공교육은 보편성은 확보했으나,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 수월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높은 사교육 지출을 초래

- 2020년 초·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15,148달러로 OECD 국가(38개) 중 6위이며, OECD 국가 평균 11,352달러보다 33.4%를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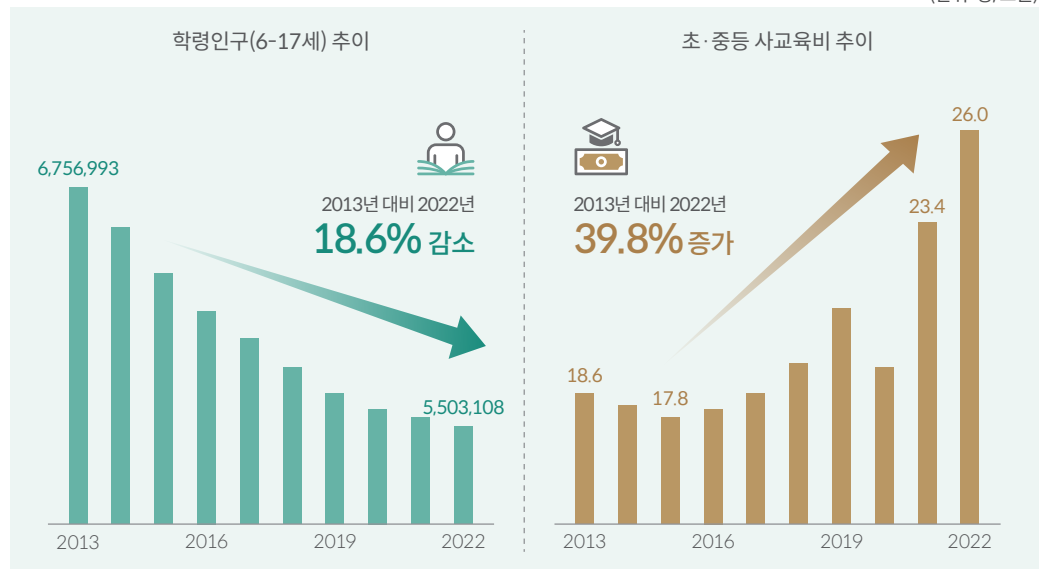
• 「국제 학업성취도 평가(PISA)」(OECD 주관)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읽기, 수학, 과학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지만, 하락 추세를 보임

※ 읽기: 556('06년) → 514('18년), 수학: 554('12년) → 526('18년), 과학: 538('12년) → 519('18년)

- 10년간('13~'22) 학령인구는 18.6% 감소하였으나, 초·중등 사교육비는 39.8% 증가 하였으며, 2022년에는 초·중등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 규모로, 한해에만 11.1% 증가

[그림 1] 학령인구 및 초·중등 사교육비 추이

(단위: 명, 조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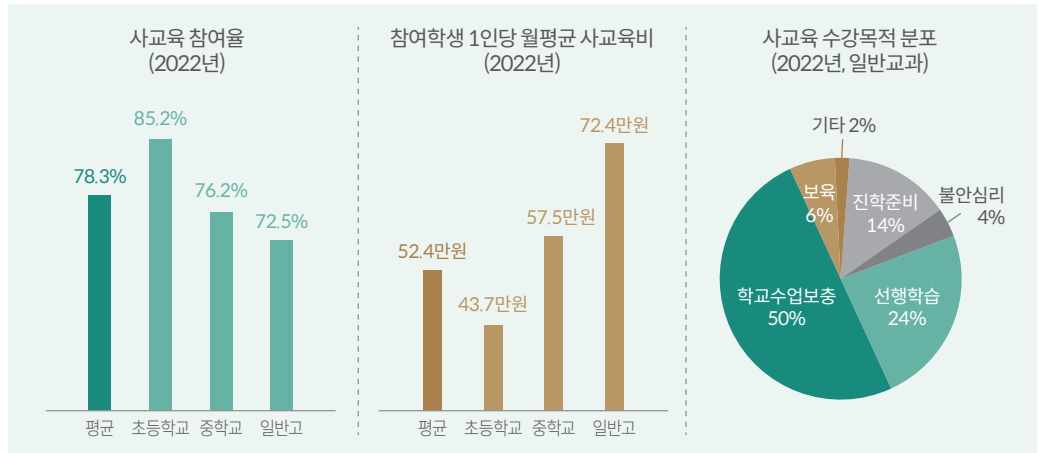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- 2022년 기준,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.3%, 참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52.4만원이며, 일반고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72.4만원에 달함

•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수업 보충 50%, 선행학습 24%, 진학준비 14% 등임



[그림 2] 2022년 사교육 참여율·월평균 사교육비·사교육 수강목적

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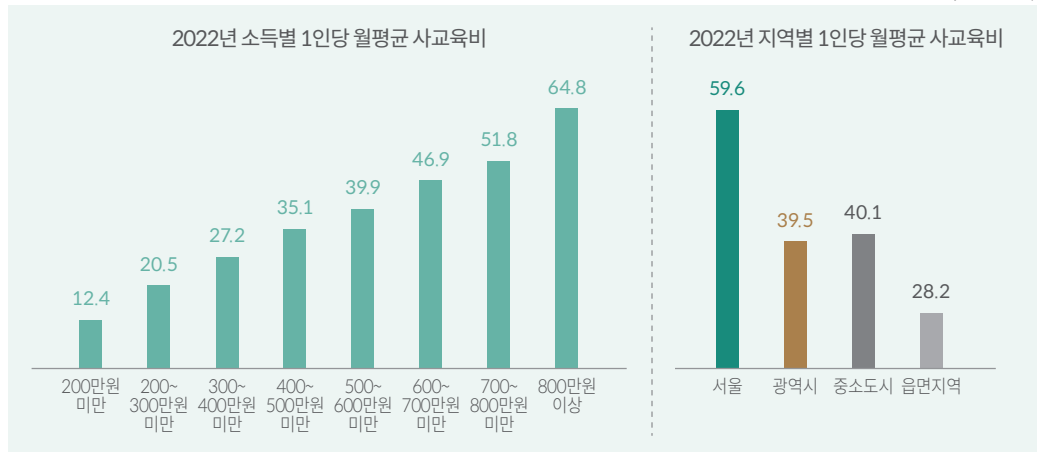
소득수준·지역별 사교육 격차 문제

▪ 초·중등 사교육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·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 이는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

-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높아지며, 2022년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5.2배 수준
- 대도시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높아지며, 서울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읍면지역의 약 2.1배 수준

[그림 3] 2022년 소득수준·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

(단위: 만원)



자료: 통계청

초·중등 공교육 디지털 혁신 필요성

▪ 기존 공교육 패러다임은 평균 학생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, 사교육이 증가하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여 왔음

- 학교 수업은 평균 학생 기준의 지식 전달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의 교육 수월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, 학생은 학원을 통한 학교수업 보충 및 선행학습 등을 하고 있음

▪ 그러나 대화형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이를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AI 시대의 교육에서는 **현행 공교육에서 부족한 수월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**

- 최근 챗GPT 등 생성형·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,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·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
-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데이터 기반 개인 수준별 맞춤 교육 및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고, AI 활용 콘텐츠로 수업 콘텐츠 다양화가 이루어지며, 교사는 학생의 사회정서적 지도자 및 학습 디자이너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

▪ 따라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

[그림 4]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



초·중등 공교육
디지털 혁신 방안

▪ AI 기반 공교육 혁신의 성공 여부는 초·중등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있으므로, 교사가 AI 기반 맞춤형 학습 적용, 창의력 개발·토론형 학습의 기획·실행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원 필요

-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AI·디지털의 이해 및 활용 등 기초 역량부터 수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교육 지원

▪ 선도교사 그룹이 각 학교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 정착을 주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선도교사 집중 육성 지원 필요

-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당 1명 이상의 선도교사를 집중 육성
- 집중 연수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공교육 혁신의 주체라는 자긍심과 선도교사간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학습공동체 운영, 해외 교육현장 시찰 기회 등을 지원

▪ **방과후 학교 AI 활용 교육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맞춤형·수월성 교육 지원**

-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교과 학습 및 진로 진학 지원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
- 교과 심화과정, STEM(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) 분야 교육 프로그램, 예능 및 체육 프로그램 등 지원
- 학교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 방식에 대학, 기업, 단체 등 우수기관을 공모 선정 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하여,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·양적 개선을 통한 사교육 완화

**공교육 디지털 혁신
재원조달 방안**

▪ **공교육 개혁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여 지역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재원 마련 필요**

- 전국 단위 초·중등 교원 연수 표준 모델 개발·운영,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지역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시·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
- 현행 특별교부금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3%에 해당하는 금액(2023년 2.2조원)이며, 사용용도에 따라 국가시책(1.3조원), 지역현안(0.7조원), 재난안전관리(0.2조원)로 구분

▪ **국회에서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진표 의원 대표발의)이 2023년 8월 31일 발의되어,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**

- 현행 3%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~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%로 조정하고, 1%p 인상 시 2023년 예산 기준 7,424억원 재원 마련
- 이 재원은 초·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, AI 맞춤형 초·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
- 6년 한시 적용으로 2030년부터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 복귀
- 높은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이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 통과 필요